

[주간동향] 2006. 6. 15~6. 21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협약식 개최
- ❖ 여성 고용률 사상 최고치 기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실시
- ❖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완료, 여성위원장은 3명
- ❖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

### ❖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협약식 개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을 위한 시작을 알렸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6월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본회의 의원과 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 ▲연금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 주목을 끈다.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당초 정부안을 대폭 확대해 30% 수준에서 확충키

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 단체들은 부분별 실천 사항도 함께 발표하였다. 먼저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발표했다. 이어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과 결혼·출산·국내입양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하였으며, 여성계는 행복한 임신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 환경조성 및 출산을 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캠페인 등을 통한 출산운동 전개를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실태조사와 정책 제언을 실천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정부 9명, 경제계 6명, 노동계 6명, 농민계 2명, 여성계 2명, 시민단체 5명, 종교계 3명, 학계 2명 등 총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여성 고용률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989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970만3천명보다 2.0% 증가했다. 이 같은 여성 취업자 수는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인 작년 10월의 976만7천명보다 12만9천명이 증가하여 고용률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의 여성 고용률은 49.8%에 달해 작년 같은 달의 49.3%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졌다. 최근 여성 고용률은 연평균 기준으로 2000년 47.0%, 2001년 47.7%, 2002년 48.4%,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47.3%, 2월 47.0%, 3월 47.9% 등으로 47%대를 유지하다 4월에는 49.1%로 높아졌고 5월에는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월에 51.1%로 작년 같은 달의 51.0%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실업률은 3.3%에서 2.7%로 0.6%포인트 떨어져 2002년 12월의 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남성 취업자는 1천358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1천349만6천명에 비해 0.7%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남성 고용률은 72.5%에서 72.1%로 0.4%포인트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5.3%에서 74.8%로 0.5%포인트가 각각 내려갔다.

###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실시

지난 15일,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재범자의 비율은 2004년 11.9%에서 2005년 16.1%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해자의 교정·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감명령 대상자, 교도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본인이 동의한 자로, 교정 치료 교육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 경험에 있는 11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20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과 치료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은 개별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감명령 처분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성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실제로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미국·독일 등에서도 성폭력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행동을 이끈다'는 인지행동모델에 기반해 지난 85년부터 콜로라도 주의 성범죄자 치료·감시 프로그램(SOTMP) 등을 포함, 50여 개 주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98년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법'이 공포돼 2003년 이후부터는 적합하다고 인정된 성폭력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토대로 향후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 완료, 여성위원장은 3명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17명의 상임위원장과 2명의 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각 상임위는 해당 부처의 예산 심사권을 가지며, 위원장은 사회권과 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총 19명의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에서 11명, 한나라당에선 8명이 뽑혔다.

이 중 여성의원은 모두 세 명으로,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조배숙 의원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의원 등이다. 이 중 조배숙 의원은 여성 검사 1호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경합 끝에 인기 상임위원 문광위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김명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3년 8개월간 일하며 역대 최장수 여성 장관 기록을 세운 초선의원으로 윤리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문희 의원은 대한약사회 이사를 거치며 약사업계의 대모로 불려온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당내 경선에서 역시 초선인 이계경 의원을 누르고 선출되었다. 이들 중 일반 상임위원장은 조 의원 한 명으로, 다른 두 의원은 검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 밖에 운영위원장에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김태홍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권철현 의원 등이 선출되었다.

### ❖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

여성가족부가 23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여성부 업무에 가족정책 총괄 임무를 부여받고 지난해 6월 23일 닷을 올린 뒤 여성과 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해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여성과 가족 내 문제로 접근하던 가족 정책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가족부의 성과는 크게 여성 및 가족정책의 확대 및 내실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가족 정책이 사회 전체적 의제로 확산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전국 시, 군, 구 164로 늘어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 발족했다. 또 여성과 가족, 보육 등 3대 주요 분야별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또 여성가족부는 출산 및 육아가 여성과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과 기업,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공감대를 조성, 이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아버지 출산휴가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 예산을 확충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아동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중점 사업으로 삼았던 성매매 방지는 최근 음성적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관심이 ‘정상가정’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한 부모 가정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과거에 비해 양적인 업무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내실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일반 여성이나 가족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크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